남미 여행 감사들 경고·경비 회수

■ 기획처, 공공기관 감사 관광성 외유 조사

1인 1,200만원 예산… 프로그램 선정 부적절

기관장·감사 해외연수 사전보고 의무화키로

기획처는 최근 물의를 빚은 남미 여행 감사들에게 자진 출장 경비 반납과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감사가 해외 연수·출장을 떠날 경우 관계 부처에 미리 보고토록 했다.

기획처는 21일,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공공기관 감사 혁신포럼의 해외연수 추진 경위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반장식 기획처 차관은 "이번 해외연수는 관행적으로 추진된 것이지만 기획과 프로그램 선정 등의 과정이 부적절했다"면서 "연수 참가자 전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지원한 예산 경비는 자진 반납토록 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또 이번 조사결과를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반영해 성과급 지급과 연임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보완책으로 기관장·감사가 해외로 출장할 경우 주부무처에 사전에 보고하고 연수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번 감사 혁신포럼의 방문기관 선정을 비롯한 프로그램 기획은 거의 여행사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해외연수의 경우 감사포럼의 회칙에 따라 운영위원회 제안을 통해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포럼 의장이 해외연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각 공공기관이 지출한 해외연수 경비는 1천84만~1천240만원이었으며 예산 집행은 별다른 제약없이 승인되거나 일부 기관의 경우 감사 본인의 전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성걸 기획처 공공정책관은 "감사협회는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3차례의 해외여행을 기획했으며 공공기관 감사들은 사정에 따라 연간 1차례 해외여행을 갔지만 그렇지 못한 감사도 있었다"면서 "공공기관 감사들의 이전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책 '공금 구매' 강요 물의

'혁신 포럼' 감사들에 공문 돌려 수십권씩 구입

공공기관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가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모 공사의 감사가 다른 공공기관들에 공문까지 보내 자신의 저서를 대량구입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인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감사 혁신 포럼'에 소속된 모 공사의 감사 K씨는 지난 4월 포럼 간사기관인 한전 측에 부탁, 79개 공공기관에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결국 권당 1만원인 K씨의 저서를 한전은 60권, 석유공사는 30권, 가스공사는 20권 그리고 코트라는 10권씩을 공금을 들여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문제의 감사가) 책 구입대금을 수령한 후 영수증을 출판사 명의로 발급한 경우도 있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은 의혹도 있다"면서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물론 세금 포탈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의 남미 출장을 다녀온 감사들이 내놓은 작년도 감사 결과 보고서의 양은 많게는 9페이지 정도, 적게는 단 한 페이지에 불과한 것도 있었다"면서 "형식적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업무 태만, 외유를 위한 예산유용 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두바이 지도자 셰이크 모하마드 방한 중동 경제기적의 상징적 인물인 두바이 지도자 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부통령·총리인 셰이크 모하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이 21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떡값 검사 실명공개' 노회찬 의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신동현 부장검사)는 21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전·현직 검사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실명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 때문에 기소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 의원이 소환에 불응해 직접 조서를 받지 못했지만 노 의원이 2005년 8월 발표·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보도자료 만으로도 실명 거론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고소 접수 후 6~7차례 출석통보서를 보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노 의원이 작년 12월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관계는 맞지만 직무상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2005년 8월18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배포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더라도 도청 녹취록에는 금품을 (검사들에게) 지급할 계획을 보여주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 실제 금품이 전달됐다는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군부대 전화번호도 ARS로 확인하세요"

'1577-9090'… 특수부대는 제외

군부대 전화번호도 자동안내(ARS)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1일 열린 국방행정의 일환으로 이날 부로 군부대 전화번호에 대해 24시간 ARS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번호 '1577-9090(국방국방)'을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명칭이 1234부대인 여단급 이하 부대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으면 전국 어디서나 1577-9090번을 누른 뒤 안내음성에 따라 1234번을 누르면 해당부대 연락번호를 자동으로 들을 수 있다.

35 사단처럼 두 자릿수의 사단급 부대 명칭은 35를 누르면 된다.

특히 육군 1사단, 1군단, 1군사령부와 같이 부대명칭이 같을 경우에도 안내음성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군사보안상 일부 특수임무 부대의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역활성화 족쇄 '규제' 풀어라

4 지역은 절박, 중앙은 느긋

행정규제의 벽에 갇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정은 한마디로 '절박'하다. 아직도 규제를 '권한'으로 여기고 있는 일부 중앙 부처 공무원의 느긋한 태도때문에 지역의 고충은 커져만 간다.

정부, 과감한 규제 철폐로 지역활성화 '후견자' 돼야

도, 작년 규제개선 120건 건의

전남도는 지난해 5월 21개 부처별로 120건의 규제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속시원하게 해결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남도 관계자는"아무리 작더라도 규제한 건을 바꾸거나 철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여기에는 보통 4~5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규제 개선이 얼마나 어려운 가를 대변했다.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곳곳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이 세워졌지만 규제의 높은 턱은 지역활성화를 더디게 한다. 개발사업 승인 단계마다 어김없이 부딪히는 규제의 벽 때문이다.

특히 농지가 많고 바다에 둘러싸인 전남은 가장 큰 '규제피해' 지역이다.

전남도는 다른 곳보다 일조량이 훨씬 많아 태양광발전 등 대체에너지 생산 적지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에 소(小)수력발전과 풍력발전 설비는 가능하지만 태양광 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같은 발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남도가 이를 고쳐주도록 건의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

중앙부처 '권한'으로 인식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단위 간척이 아닌 적정 규모의 공유수면 매립 시에도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 면허를 받아 준공에 이르기까지 관련 행정기관 협의 및 승인을 4회 이상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립 면허절차는 ▲기본계획 반영요청→▲매립 면허→▲매립 실시계획 인가→▲준공 인가 순이다. 매립 실시계획 변경의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지역차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 적용은 광주·전남처럼 경제적 여력이 크게 뒤떨어진 자치단체에게는 새로운 규제로 다가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고지원에 일정 비율만큼 지방비를 부담하는 '매칭펀드'사업의 문제점이다.

광주·전남은 전국 시·도 가운데 재정여건이 가장 나쁜 지역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간 차별을 두지않고 대부분의 국비지원 사업에 지방비 분담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률적 적용 새 규제로

정부가 지자체 재정부담 능력에 대한 고려보다는 사업추진만을 우선시해 지자체간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일부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있어 자치단체간 유치경쟁 과열로 사실상 지방비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과감한 행정규제 철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인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지역활성화의 '후견자'가 돼달라는 주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지역의 몸부림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간 차별성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